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 vs “재원대책 부실”

여야 ‘문재인 케어’ 놓고 공방...민주 입법 추진 3야 “결국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 부메랑” 비난

여야는 10일 전날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치료비 걱정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 3당은 ‘문재인 케어’ 방향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원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선심은 대통령이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우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병원이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들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 치료비 때문에 설움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가정 경제가 파탄 나는 ‘메디 푸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플란트 비용은 6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15세 이하 아동 임플란트 부담률은 25%에서 5%로 내려간다”며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줄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정확보 방안과 관련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30조를 두고 일부에서는 벌써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성급한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 20%를 지원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편법적인 방식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재정을 지원해왔다”며 “법정지원액만 제대로 지켜주면 건보료 인상 또는 고갈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재정확보 대책이 부실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의료 수요가 늘어 건보료 상승을 불러오고 이는 결국 국민과 국가경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고, 어린이 난치병, 더 나간다면 미성년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치료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방향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며 “178조원(문재인 정부

가 공약한 국정운영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추계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했으나 건보료 상승을 우려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문재인 케어의) 큰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건보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을 문제삼았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재정이 곧 적자 전환돼 2023년이면 적립금도 고갈될 것이라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진단이 오진인 아니라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쌓아둔 적립금은 모두가 바닥날 것이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당청일체냐 존재감이나

與 첫 정기국회 앞 의견 분분

여당으로서 첫 정기국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당정관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로서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는데 민주당은 최대한 보조를 맞추며 ‘당청 일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권이 국정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당내에서는 이제 정부의 주도권을 당 쪽으로 조금씩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개혁입법 논의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권의 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정 운영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으로부터 ‘청와대 거수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면 협치를 통한 개혁입법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0일 “우리가 지난 정부 여당을 겨냥했던 ‘거수기’ 비판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당청 갈등은 물론 경계해야 하지만, 여당으로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지금까지 ‘당청 일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권이 국정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당내에서는 이제 정부의 주도권을 당 쪽으로 조금씩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개혁입법 논의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권의 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정 운영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으로부터 ‘청와대 거수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면 협치를 통한 개혁입법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0일 “우리가 지난 정부 여당을 겨냥했던 ‘거수기’ 비판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당청 갈등은 물론 경계해야 하지만, 여당으로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기영 “황우석 사태 죄송...일로 보답하겠습니다”

과기혁신본부장 사퇴 거부

야당과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산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이 10일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으로 돌아와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정착되어 가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무너지면서 지난 9년간 기술경쟁력도 많이 떨어졌고, 현장의 연구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로써 보답하고 싶다”며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11년만에 ‘황우석 사태’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황우석 박사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에 아무 기여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2006



박기영 신임 과기혁신본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원로 및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황우석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년 초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에서 드러나 보좌관직에서 사임했으나, 공저자였던 서울대·한양대 교수들과 달리 학교 당국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행사하고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과학기술 정책 집행

컨트롤타워다. 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박 본부장은 지난 7일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저지 정부가 나서야”

박지원 곡성공장 방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9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을 방문해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저지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호타이어가 유일하게 지역 기업으로 하나 남아 있는데,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아시아자동차가 부도났을 때도 내가 적극



적으로 나서 현대가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 동안 국민의 당이 (금호타이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저지 대책위가 요청한 국회에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반대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를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민주 김병기 ‘고위급 군인 징계법’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0일 군 서열 3위 이상인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일명 ‘박찬주 징계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보다 선임으로 3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열 3위 이상인 군인의 경우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으며, 최근 공판병 상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대장 역시 이런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심의대상이 징

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 장성일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 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은 자동 전역조치가 되면서 군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고, 이를 막고자 군 검찰은 장성급 피의자의 직위를 유지한 채 수사를 하면서 공정한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함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